



[해설] 위기의 K-바이오 빨리빨리 문화에 신약의 꿈 잇단 좌절 03



Economy

코스피	1909.71 (-7.79)	코스닥	564.64 (+13.14)
금리 (미국 3년)	1.15 (-0.01)	환율 (원/달러)	1214.90 (-0.40) (7일)

<시장형 공기업 15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 평가 결과(2017년)>

분류	대상
전체 허용(7개, 46.7%) 웹 개방 '양호'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부분 차단(4개, 26.7%) 웹 개방 '미흡'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전체 차단(4개, 26.7%) 웹 개방 '매우 미흡'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웹발전연구소

공공기관이 웹 차단 '정부3.0 정책' 역행

웹개방성은 국민 알권리

<上> 겉도는 공공기관 웹개방성

웹 완전개방기관 극히 일부분 대부분 검색엔진의 접근 차단 기밀정보 아님에도 검색 안돼 '국민의 알권리 방해' 지적도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한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공개하는 정보에는 아직도 '벽'이 존재한다. 정부 주요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상당수가 검색엔진을 통한 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한다는 정부 3.0 정책에 역행할 뿐더러 국민의 정보 접근을 막는 것으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 지적을 받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3회에 걸쳐 웹 개방성의 필요성, 사례, 향후 방향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정보 많아졌지만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웹 개방, 정보공개에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웹개방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웹 개방성은 이용자가 웹에 공개된 정보에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해 이용

하고, 웹사이트의 정보를 자유롭게 공개·공유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웹 개방성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일반 사용자가 검색엔진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웹사이트가 완전히 개방되면 사용자들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포털 사이트 등 검색엔진을 통해 공공기관이 가진 자료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웹 생태계의 사용성과 투명성 향상도 기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웹 개방성 실태를 살펴보면 웹사이트를 완전히 개방한 기관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검색 엔진을 통해 찾을 수 없다. 기밀정보가 아님에도 정보가 검색되지 않아 국민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웹발전연구소가 지난 2017년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산하 기관 13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진단 결과, 그 중 8곳(61.5%)이 정보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면에 계속)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日 '백색국가 韓 제외' 시행령 공포

관보 게재 후 28일부터 시행 韓 국가등급, A→B로 '강등'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관련기사 2면>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이번에 2004년 지정된 한국이 15년 만에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되면서 26개국으로 줄게 됐다.

일본은 이 용어를 1987년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백색국가는 그룹 A가 된다.

그룹 B로 한단계 낮은 대우를 받게 되는 한국은 오는 28일 이후 나사, 철강 등 수많은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 대표이사가 갤럭시 노트10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10' 공개... 두 가지 크기로 이원화

<6.8인치·6.3인치>

삼성전자, 美 뉴욕서 언팩 행사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S펜을 앞세워 스마트폰 시장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삼성전자는 7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 바클레이 센터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노트10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관련기사 8면>

갤럭시 노트10의 가장 큰 변화는 모

델 이원화다. '갤럭시 노트 10+'라는 이름으로 6.8인치 제품을 내놓고, 갤럭시 노트10은 6.3인치로 크기를 제한했다.

디자인도 전면 인피니티디스플레이의 가운데에 단일 카메라를 설치했다. 대칭을 유지해 심미성을 강조하고 실제 셀피 촬영에서도 좌우를 동일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두께는 7.9mm에 불과하다.

S펜은 갤럭시 노트10이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이다. 허공에 제스처를 취하는 것만으로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는 '에어액션'과 함께, 손글씨를 텍스트로 바로 변환해주거나 색상이나 크기를 바꿀 수도 있게 했다.

초고속 충전도 가능하다. 배터리가 각각 3500, 4300mAh에 별도 판매하는 무선 충전기로 45W까지 빠르게 저장할 수 있다. /뉴욕(미국)=김재용 기자 juk@

"외환시장 선제대응... 금리인하도 고려"

홍남기·이주열 등 경제·금융수장 금융시장 안정화 위해 머리 맞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공매도 규제, 통화정책 대응(기준금리 인하) 등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경제 기초체력이 있는 만큼 일본계 자금 이탈 가능성 등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거시경제금융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중구 금융위원장(왼쪽부터)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긴급거시경제점검회의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회의'에서 "증시 수급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강화 등 가능한 수단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

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이주열 총재와 최중구 금융위원장,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책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악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미국의 금리인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며 "국내적으로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투자 부진 및 기업실적 악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어려움을 더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과도한 불안심리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40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금융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상황을 냉철하게 주시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감시하는 한편, 과도한 쏠림 등으로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j89@